

제43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4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27일(목)

장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 부별심사: 경제부처

(8월26일 23시56분 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지켜서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시간 너무 늦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경제부처

○위원장 이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위원님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수변경을 하게 되면 또 이연희 위원님이 중간에 중단하고 이래야 되니까, 하시지요.

○이연희 위원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단이 있는 오송과 세계 최대·최신의 HBM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께 드

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먼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SK하이닉스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빠져서 한 해 7조 원의 적자를 보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를 포함해서 지원 논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259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389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첨단산업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지원을 통해서 다시 국가 전체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금도 몇몇 첨단산업 분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이 그렇습니다. 최근 캐즘(chasm)으로 인해서 이차전지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산업체들이 국회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 일시적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그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또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작년부터 거세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차전지 업체들의 요청을 반영해서 법안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이차전지 업체들의 이런 어려움 그리고 그 호소 직접 들으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듣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법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세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차전지 업체들, 다른 첨단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적자가 나면 생산세액이든 투자세액이든 환급을 받지 못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재정경제부장관님, 이런 이차전지 업체들의 애로사항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렇게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이차전지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항구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도, 한시적이라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급제도를 저소득자, 중소기업 등에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애로가 있다면 오히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연희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산자부장관님이나 재정경제부장관님 같은 경우 이차전지 업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요청들을 받고 여러 가지 법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세계개편안 발표하실 때 생산세액공제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적자를 현재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세액공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일시적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보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재경부나 산자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잘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장관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 투자세액공제나 생산세액공제도 되지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우회해서 보조금이라도 직접 주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조금 전에 임호선 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녀온 한화큐셀, 태양광 생산업체 관련해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쪽에도 좀 보조금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서는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 두 분야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 산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알다시피 WTO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고 중국마저도 그동안 보조금을 주다가 폐지하고 있는 것들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저희는 생산 초기의 적자 단계에서는 당연히 낼 세금,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환급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월공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더 강구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부터 이미 정부와 국회에 많은 호소들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들을 내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해서 실제로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면 어떤 산업까지 할 거냐 그 형평성, 그 범위 이걸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연희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는 이미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생산세액공제를 하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보조금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생산세액공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으니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미국 같은 경우도 IRA 하면서 환급형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조금 주다가 이제 폐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적자가 나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초기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초기에 소위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을 상용화하기 전에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투자할 수 있게 세액공제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인데 그것이 어려우면 보조금이라도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반영이 안 되면 다른 대책이라도 찾아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보조금과 세액공제 말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연희 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니까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업체에서 요구하는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초기 적자 해소를 위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말씀하는데 저희들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업종간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후에 WTO 제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장관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국토부장관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주공항과 관련해서 용역예산비 5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도,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마무리된 데 기초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원래 작년 12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언제 됩니까? 언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곧 발표할 생각입니다.

○이연희 위원 끝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할 때 청주공항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종에 제2 대통령 집무실 임기 내에 완공을 하고 세종 국회의사당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주공항이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청주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발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항개발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재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 야당 간사로서 잘 해 주시기를,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김윤덕 장관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상범 위원 보니까 또 허리 아프서 가지고 오래 못 앉아 있고 자리 비우시고 그러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유상범 위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최근에.

우리 어제 자에 뉴홈 분양 신청자에 대해서 전용 모기지론을 채택해 주기로 했다 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자료도 봤고요. 여하튼 야당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했고 또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민간 매입형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질문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팔면 인정을 하고 2028년부터는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이분들이 장기 8년 정도 재산상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제한을 받지요, 임대기간 제한 있지요. 그런데 아시지요? 그 기간 중에는 팔 수도 없는 때도 제한도 있지요. 거기다 부기등기까지 해야지요. 굉장한 재산권의 제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23조 3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국민 재산에 대한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보상을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것이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배제 그리고 장특공에 대한 우

대.

그런데 이것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무한정 되면 적절치 않다 그 부분도 일면 타당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지금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대상이 한 6만 8000가구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임대가, 올해 임대기간이 있는, 2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 경우는,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임대가 끝나고 나서 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면 결국은 국가가 했던 보상을 지금 완전히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재산권의 과한 제한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후에 받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해 왔던 일입니다.

뉴홈 분양자에 대해서 전용 모기지론을 채택한 것과 이것은 결국 정책의 일관성, 국가가, 정부가 했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사적 계약에 있어서도 그 계약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지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적 자치가 있는 나라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 약속도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단순히 너희들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건 사정 변경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 정부 폭력이에요.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을, 그동안 계약에 대한 신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소급해 버리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철학적인 측면이고 법치에 대한 우리 생각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기간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적어도 이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본질, 가장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정부는 이렇게 결정해 놓고 위약금 어떻게 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농림부장관님, 저도 몰랐지만 논콩을 정부에서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벼 생산이 과잉되니까 논콩으로 전환했어. 그래서 원래 6만t을 매수해 주기로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유상범 위원 그러다 안 되면 4만t을 매수해 주는 걸로 줄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올해는 6만t을 했고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인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 정부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다시 벼 수매를 하면서 수매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유상범 위원** 이런 단순, 정부의 논공 재배도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지금 했던, 재산권에 대한 과한 제한을 해 놓고 이걸 지금 일방적으로 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정부가 과연 시장경제와 사적 자치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충분히 시험대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김윤덕 장관님, 우리 용산공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주택공급지에 용산공원이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업무보고……

○**유상범 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주택공급지 대상으로 용산공원이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당연하지요.

○**유상범 위원** 예, 않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상범 위원**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된 게 결국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상범 위원** 대한민국의 땅이었으나 임오군란 때 청나라가 주둔하면서 그다음에 주둔지로 썼고 그리고 일본 부대가, 일본의 사령부가 주둔했고 그다음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대한민국 땅이었으나 대한민국의 땅이 아닌, 주권이 행사 안 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로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사업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금싸라기 땅이, 거대한 땅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발할 생각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이광재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도 거쳤으니까 아마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된 과정도 잘 알 겁니다. 이건 역사성이 있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당신의 철학이 담긴 거예요. 단순히 녹지가 됐냐 아니냐 이것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언제 녹지였습니까? 이것 부대 기지였어요. 반환받으면서 녹지로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장관께서 용산공원에 대한 검토 그러면서 그것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용산공원 주택공급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근거 없는 비난 또는 근거 없는 흠내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인 제공은 장관이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유상범 위원** 아니, 검토를 한다고 했지요. 나중에,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초창기에 이 논란이 되게 된 게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럼요. 검토하겠다,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만나 가지고 탄천물 지역 한번 적극 검토한다고, 제안받으셨고 검토하기로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상범 위원** 이런 역사적이고 어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적 의지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하시고 대안이 있으면 빨리 그 대안을 적극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언이고.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고민 안 하실 거예요? 왜 답을 안 하세요? 허리 아픈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하시라고요. 용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은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상범 위원** 구윤철 장관님, 제가 하나 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소위 증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집은 사는 곳이지 보유하는 곳이 아니니까 사는 곳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집 하나 살고 전세 살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거하면서, 한 세대를 가지고 있는 한 집에서 주거하는 것과 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뭐가 있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투기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투기라기보다는요 거주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주하는 데 있어서 더 페이버(favor)를 준다는 그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페이버를 줘야 되면 두 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거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학교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내가 사는 집의 선택을 나라가 강요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강요지요. 비거주하면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강요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은요……

○**유상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 있지요? 헌법에 명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것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유상범 위원 나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 자체를. 주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다? 설득이 안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 세법 자체가요 보유에 대해서, 지금 중부세 같으면 보유를 15년 하게 되면 50% 이렇게, 살지 않아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주거를 할수록……

○유상범 위원 아니 부총리님, 그게 왜 나온지 아시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이제……

○유상범 위원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를 좀 정착하겠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거를 왜 나라가 주거의 선택을 강요하냐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거주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게 결국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전달한 겁니다. 좀 깊이 고민해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서울에 있는 주택은 다른 지역에서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누구도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어디 가서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글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 다시 한번 하시고, 당대표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당 간사로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모두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본법을 만

들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재정부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가지고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보게 되는 통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53.2%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가 5년 전의 54.3%에서 53.2%로 점점 떨어져지고 있는 거지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져지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OECD에서 나온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인데, 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남자의 중위소득과 여성의 중위소득의 그 차이를 가지고 남성의 중위소득을 나눴을 때 우리나라는 약 29%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38개국 중에서 가장 그 차이가 큼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지금 저임금·비정규직의 고용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성 비정규직은 보니까 2015년에 임금 격차가…… 여성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2%였는데 지금 2025년에 47%로 상승을 하고요. 24년의 저임금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 격차의 중요한 부분을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고용형태별,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하면 61% 수준, 중소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했을 때 70.5% 수준인데요.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오른쪽 표에 보면 밑으로 죽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들의 임금 수준이 점점 떨어져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차피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경제부총리께서 만약에 불평등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총론적으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임금 격차 이런 부분은 아마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복합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능력, 생산성이라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사실은 비정규직 같으면 조금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문화가 정규직은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조금 적게 하는 이런 문화적

인 속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동안의 이런 문화가 바람직하다면 지속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서 생산성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태호 위원 특별히 정부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뒀다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우리 사회의 국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여기서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가 그러면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공 지출은 우리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기획예산처장관님, 저 표를 보면 OECD 평균이 0.11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GDP 대비입니다. 0.11인데 우리는 0.07%, 32개국 중에서 20위로 나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공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지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의 창출 또는 노동시장 안전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통계겠지요?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실업급여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한민국으로서의 하여튼 이 양극화, 특히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중구조로 인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정태호 위원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 67번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93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그다음에 97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도의 도입,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부에서 나오셨나요?

차관님 어디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장관직무대행입니다.

○정태호 위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검토해 보신 적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지금 성과공유제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다양한 방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언제 발표를 할 건가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여하튼 신속하게 저는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그런 교섭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태호 위원**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중간 상황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것은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것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같이 협업해서……

○**정태호 위원** 꼭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정태호 위원** 실제로 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도는 영국·덴마크 이런 쪽에서 시행하고 나서 임금격차 해소하는 데,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19%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3%의 격차 해소를 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하는 것 그리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이것은 신속하게 정부가 추진해서 올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정태호 위원** 대한민국의 이 부분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정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그런 어젠다가 잘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께서 한번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평등이 대·중소, 수도권·지방, 남녀 또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또 빈부 격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떠나 가지고 존속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제도개선 또는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제가 직접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정부가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여당 간사로서 노력하고 있는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동산의 투기를 막아야 되겠다, 그게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내 집을 갖고 싶고 또 내 집을 갖게 되면 이게 저축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동기도 존재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해법을 찾을 건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오고 가는 게 과거 세종대왕이 토지개혁을 할 때, 그때 당시 공법 개혁을 할 때 보면 17만 명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현, 지역주민까지 17만 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당시 세종대왕이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57%, 반대가 42%였다는 거지요,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과정 자체가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외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김정관 장관님, 얼마 전에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때 뵈었는데 상대방 러트닉 장관이 연설하는 것 보니까 진짜 힘드시겠더라고요. 많이 애쓰십니다.

그래서 9월 초라고 했나요? 첫 번째 투자금액이, 사업과 그게 정해지면 저희 재경위에서도 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해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투자를 끌어와서 우리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저희 인천의 강화 남단이 작년에 저희가 장관님께도 직접 건의를 드렸습시다라는 신청한 지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적정성 검토, 행안부에서는 재해영향성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이오에 강점이 있고 또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들어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철도 연결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인천의 차이나타운 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이나타운하고 월미도하고 신포시장 그리고 인천 내항 1·8부두 이쪽이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 인천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행열차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인역까지 선이 겹쳐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를 급행열차를 좀 들어오게 해 달라는 이런 대내외적인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용역도 하고 세 가지 방법도 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하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관광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아타는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직결하는 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1999년도에 그게 국토부 사업이었습니다.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선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예타가 통과됐고 그래 가지고 열차 값만 나오면 돼서 2020년도에 220억이 나왔는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합의해 가지고 40억 정도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진장 쫓아다녀 가지고 서울시랑하고 인천시장을 설득해서 40억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사이에 그 열차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다시 하니까 이게 안 되겠대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강남에 사는 분이 김포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공항으로 올 수 있는 거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또 예타 문제가 걸려 있으면 예타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분명히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타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근거라든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지금 인천항 내항 터미널이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연안항은 미어터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제주항은 그 터미널은 넉넉한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과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좀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3배 정도 더 넓습니다, 제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검토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시지요? 그래서 인천항만공사하고 좀 협의를 지시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민생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좀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아까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미래대응기금이 한 150조 정도 규모까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청년, 미래, 교육 이런 브로드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저희가 제일 필요한 게 교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계시지만 서울에 땅을 마련하지 못해서 집을 못 지으면 교통이라도 마련을 해 가지고 그런 민생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5차 철도망 계획 보니까 실링이 40조 맞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은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난 4차가 43조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150조나 이렇게 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 복지가 중요한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50조를 다 그러면, 150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150조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교통 복지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아파트는 못 짓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미래도 중요한데, 미래 관련된 것도 준비하실 수 있고 제가 일반회계를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의 용도는 아닙니다만……

○배준영 위원 보다 실링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현실적인 수요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엄격하게 5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광주 동구남구울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국토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8·13 부동산 공급·금융 대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우리의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 지원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장기 민간임대를 주택 공급의 중요 축으로 인정했다는 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도걸 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청년들, 신혼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16억 아닙니까?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은 영끌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도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시장을 보면 74%가 개인입니다.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영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금 회수는 결국에는 캐피탈에, 개발 매매차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1인 가구 증가 등 급증한 임대 수요를 개인 주택자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으니까 재정이라든가 택지, 한계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뭐냐 하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서 도심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과도한 규제 그리고 세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경직적인 임대료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상한으로 묶어 가지고는 도저히 새로운 공급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금융 규제입니다. 금융위원장님도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금이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이라든지 추가 매입, 건설이 지금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게 자본의 재순환 고리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분량을 제한하는 그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융 규제가 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총리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유세 부담도 과도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거임대 영업이익률이 3~4%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이것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기업형 임대 공급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려고 한다면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제, 금융, 규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업형 임대 활성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도가 되셔서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님께서 함께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님께서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기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안 발표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20년 장기임대 제도는 2+2로 묶여 있는 것들을 좀 풀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자 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세제 문제라든가 또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나 또 금융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기업형 임대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향 아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국회 입법이라든가 재정 지원 과정에서 같이 논의토록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여기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진행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전국 평균적으로 가족동반이주율을 보면 목표가 75%인데 평균이 7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북하고 충북이 50%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69점입니다. 70점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BCD로 따지면 D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를 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광주로 간다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갈 텐데 거기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정주여건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하고 가족동반이주율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재경부장관이 담당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송언석 위원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해 봐야 지역에 가족들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영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적극 검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언석 위원 환경부장관 어디 계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여기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어저께 차관님밖에 안 계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천댐 건설사업, 지금 이것 계획이 없어지는 걸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거제 3일 동안 950mm 비 온 것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송언석 위원 여기도 비가 오면 김천 시내가 찰랑찰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천댐 꼭 건설해야 되니까 환경부장관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그냥 2초간 여유 있게 나오는 것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것 재정부인지 예산처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미래 무슨 자금 있지요? 미래 무슨 기금 만든다는 것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응기금, 기획예산처입니다.

○송언석 위원 이게 보니까 초과세수 또는 추가세수를 빼내 가지고 국회 예산심사 밖으로 빼내기 위한 비자금 만들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설마 그러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다 빼 가지고 세입세출 외로 추가세수, 초과세수 남는 것을 기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다 법률에 근거해서 합니다.

○송언석 위원 중요한 것은 초과세수가 발생이 되면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채무상환이라든지 지방세 교부세 정산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우회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가재정법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또 기금법에 의해서 적립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금법에 의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접니다.

우리가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금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기금을, 독립된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송언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장관님은 법을 아직 안 읽어 보셔서 그래요. 제가 법을 다 읽어

봤어요. 법을 다 읽어 봤더니 지금 세입세출 외로 따로 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초과세수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하는 경우 그런 거고요 모든 세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당연히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거칩니다.

○**송언석 위원** 장관님,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조문을 오늘 다 읽어 봤습니다. 조문을 읽어 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또 심사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지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재경위에서 심사할 겁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송언석 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기금의 수입은 추가세수 또는 초과세수거든요.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늘상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출은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교육·인재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항구적인 사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또 수입하고 지출이 매칭이 안 되는 이런 기금이예요. 내용 자체도 국회 심사를 안 받는 쪽으로 나가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내용도 이렇게 매칭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이 정권이 있는 동안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 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별도로 모아서 일단 쓰고 그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초과세수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하면 안 된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이 기금도 저희가 국가재정법에 준하고요. 또 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기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당연한 세입세출에 따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초과세수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정해진 용도대로 이것을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사전에 모든 심의를 거칩니다. 다만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건 20%, 어떤 건 30%, 기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없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에 본질의 때 하시지요.

다음,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보충질의 분야는 송미령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충질의 분야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와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한국마사회가 신설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렛츠런파크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충청권에는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주를 호남권이라고 둔다면 딱 보니까 충청권만 빠져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강원도도 없습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예, 그렇지요.

신규 렛츠런파크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2009년도 경북 영천시 선정 기준을 보니까 신규 경마장 공모 당시 평가 기준이 총 1000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 항목을 보면 부지 적합성이 250점, 입지 여건 350점, 사업 추진 효율성 200점, 말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 200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 이 1000점의 평가점수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대응을 평가 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님, 인구감소지역에 렛츠런파크 시설을 유치했을 때 발생하는 지역 경제 효과를 한번 별도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최근에 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반대로 그동안에 기존의 신규 렛츠런파크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 배후 지역의 인구와 경제 규모에 200점이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평가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님, 지금은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제가 한국마사회에다가 지방소멸 극복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변이 돌아왔습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윤용근 위원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공기관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자체적인 정책 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저한테 답변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렛츠런파크가 들어서면 고용, 관광, 소비, 말산업 등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다면 시설 입지를 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특히 충청권에는 현재 렛츠런파크가 없습니다. 이 지역적 공백도 한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지금은 마사회가 안 나왔으니까 장관님께 여쭙습니다.

현재 서울 렛츠런파크 이전도 계획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직 구체적인 후보지나 평가 기준은 확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알기로는 금주, 내일이군요. 금주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용근 위원 어찌 됐든 향후 이전이나 신규 렛츠런파크 공모가 추진될 경우에는 과거처럼 그 배후 인구나 경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도 함께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균형발전 기여도를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마사회가 자체적으로도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중장기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본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해 보니까 이 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예결위가 제일 질문도 많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한동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의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각발달, 운동발달, 언어·청능, 음악, 놀이·심리 등 비의료 재활서비스 바우처를 기준 중위소득에서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인들에게,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취지와 필요성 모두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더 많은 노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180%를 초과하면,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지금 제도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원받던,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원받던 장애아동들 중에서 매년 약 1000명씩 정도가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마 소득기준이 변동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 기준에서 1원이라도 부모가 더 벌게 되면 그동안 받던 지원이 아예 0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동훈 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195명이 직전 연도에 받았는데 아예 못 받게 됐었습니다. 부모에게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장애아동의 재활을 이제는 국가가 하나도, 이 기준에 따르면 지원하지 않고 전부 맡기고 국가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 이런 철학은 지금 2026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좀 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재활을 해서 장애가 굳어지지 않고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재활치료를 강화하는 건 필요합니다.

○**한동훈 위원** 초기 재활치료를 더 강화했을 경우에 나중에 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의 비용을 아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되 예를 들어서 액수가 너무 많은,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를 미루더라도 차등을 두되 지원이 0이 되게 하는, 이렇게 소득기준의 절벽으로 남는 이 지금의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도 기준중위소득 180% 안에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위원 제 말씀은 180% 안에 들어오는, 위에 되는 쪽이라도 액수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려면 기준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두 번째는요. 이 서비스를 받으려는 대기자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서비스가 유용하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산의 반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대기자는 60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2025년에는 220억 원의 예산이 쓰이지 않고 반납됐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오히려 반납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뭔가 배분이 잘못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역 간 미스매칭이 좀 있었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제공기관의 어떤 역량, 지역 간에 제공 기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총액수의 예산 기준으로 볼 때 220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이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미스매칭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미루지 마시고 저에게 알려 주시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가 올해는 5월에 집행 점검을 해서 지역 간의 예산 사용에 대한 걸 파악을 해서 지역별로 조정을 하는 걸 해서 이게 불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산업부장관님, 혹시…… 오전에는 없으셨는데요.

서남권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미국이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얘기하면서 왜 미국의 투자가 늦어지느냐 내지는 미국에 투자하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보도가 있었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보도 사실이 아니며 가지고요 지금 관련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그런 식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미국의 투자 요구에 어떤 영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수요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부총리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앞서 질의에서 이미 외국에서 도입했었고 그때 당시는 위험성을 크게 몰랐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외국에는 있었는데요 외국에 투자하니까 위험성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도 마련하면서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공공기금·법정기금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68개 기금 중에 회신이 온 게 60개 왔습니다. 봤더니 전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위험한 종목이다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지침에서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기금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투자를 못 하게 해 놓고 국민들한테는 충분한 주의나 교육 없이, 안전장치 없이 방치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방치한 게 아니고 해외에 오히려 했을 때 교육도 안 받고 너무 리스크가 높아 가지고 국내로 하면서 좀 리스크를 줄여 준다는 그런.....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고위험상품이지요? 고위험상품의 추종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상품이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해외에 어차피 나가니까 국내에서 좀.....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남이 하는 거랑 자기가 하는 거는 다르지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더 있어서요 빨리하겠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지금 반도체 초과세수가 일시적인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거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현재는 일시적인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지금 대체로 전문가들은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 다 쓰지요, 정부 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다 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것을 얼마를 쓰느냐 그다음에 얼마가 더 들어오냐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종욱 위원 기본적으로 다 쓰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다 쓴다 그랬어요. 채무상환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그 표현은 아니고요.

○이종욱 위원 채무상환, 바보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기억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안에 채무상환 관련해서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네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바보가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대통령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들어온 것을 다 빗 갈는 데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시를 든 거지요.

○이종욱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상식에도 안 맞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시적인 호황을 항구적인 호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자, 맞지요?

그다음 금융위원장님, 8·13 부동산대책에서 DSR 소득산정 기준 바꾸셨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바꾼 것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반도체기업 성과급으로 나온 것, 근로소득 계산을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 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지금도 소득이 일정 정도가 아니라 약간 변동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1년이 아니라 2년……

○이종욱 위원 그것은 기타소득이고……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종욱 위원 기타소득이고, 인건비는 현재는 100% 인정입니다. 현재는 2분의 1 하는 것은 기타소득이고 바뀐 것은 모든 소득에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은행에서도 DSR 할 때 결국 소득이 될 때는 자기들이 2년 치 같은 것을 조정하는데 성과급 같은 것은 더 튀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평준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현재는 성과급 2분의 1 안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일시적인 소득이고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된다 이 이유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도 그런 게 있으면 20% 하는 것을, 30% 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평준화하는 겁니다, 평준화.

○이종욱 위원 어쨌든 다 쓰라는 겁니다, 쓰는 것을 절제하라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절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종욱 위원 평가를 못 해 주겠다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소득상환 능력을 보는데 소득이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

는데 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평균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일시적인 소득은 전체를 인정을 못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더 늘렸지요. 더 늘렸잖아요, 2분의 1, 3분의 1.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러니까요. 그런 변동폭을 좀 완화시킨 겁니다.

○이종욱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국세청장님, 성과급 받을 때 전부 소득이 아니라고 누진세 깎아 줘니까? 다 받지요, 세금 계산할 때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세법에 따라서……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정부가 다릅니다. 돈은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인건비로 나가면 금융위원장 기준, 세금으로 나가면 기획예산처장관님 기준,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계부채를 DSR, LTV, 총량규제, 이것 다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종욱 위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격해야 할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 정혜경 위원입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늦은 밤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민의 오래된 숙원과제, 국도 79호선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79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인해서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 나다 보니까 다시 또 교통이 정체되고 다시 또 사고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소방차랑 구급차도 진입이 안 돼서 정말로 주민들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부가 여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예견성 있게 국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도로입니다.

다행히 올해 예타 면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따라서 최종 반영할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타가 통과되었다고……

○정혜경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포함.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혹시 노선이 어떤 게 되신 겁니까, 정확히?

○정혜경 위원 79호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79가 2개가 있는데요. 창원 동정에서 북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혜경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창원 합성에서 동읍이 있고요. 그런데 79……

○정혜경 위원 예, 창녕도 있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확장 노선 얘기하신 거군요.

○정혜경 위원 예, 확장 노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오늘 아마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여기가 제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인데 왜 안 됐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마 AHP에서도 0.5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저도 아까 오후에 좀 늦게 이것을 받아 봤는데요, 발표 내용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낙후도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정혜경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게 오랫동안 숙원 과제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지금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도를 계획해서 입안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차선을 작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것인데,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지금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위원님, 그 구간에 대해서 어쨌든 KDI에서 예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국도는 일괄적으로 예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국도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 또……

○정혜경 위원 지금 엄청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 것하고 또 막상 정량적인 B/C라든가 AHP 하는 과정에서 좀 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정혜경 위원 아니, 그런 게 주민들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에 먼저 나서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그것은 저희하고 같이 국토부가 그리고 또 KDI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떤 수치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거기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정혜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변경해야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노선도 다 마찬가지로 지지요, 그 기준이 변경되면.

○정혜경 위원 아니, 진짜로 거기 한번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가지고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교통정책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들이 한번 도로 관련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께서 지금 정말로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혜경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이전 관련해서, 입지 선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김성환 장관님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지역으로 옮겨서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이렇게 만들고 지역 산업도 키우고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자는 그런 것이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데 2차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도 이런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어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도 평가가 되고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곳, 이것이 기준에 포함이 되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정말 없네요. 더 해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정혜경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발전사 통합 이전 관련까지 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갑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저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요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관심이 매우 높는데 10월이나 11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수렴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원래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저희들이 1차로 지방정부의 대표들로부터, 지자체장들로부터 일단 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자와……

○문대림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부터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대림 위원 진정성 있는 판단 기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께서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균형발전 기여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말씀이신데 공공기관 이전은 저는 산업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렛츠런파크와 렛츠런팜이 같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주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말 생산과 조련의 자연적 기반인 초지, 대한민국 초지의 50%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주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그다음 2014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11년 연속 정부의 이행실적 평가 1위,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주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지요. 그리고 말 사육의 55% 이상을, 전체 말 사육의 55% 이상을 담당하는 곳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주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김성환 장관님도 잘 아시네요.

그리고 국내 경주마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곳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주입니다.

○문대림 위원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혹시 레클리스라고 들어 봤습니까, 레클리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무엇일까요?

○문대림 위원 김성환 장관님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모릅니다.

○문대림 위원 김윤덕 장관님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쟁 영웅마 레클리스, 미국에 동상이 네 군데 세워졌고요. 그 전쟁 영웅마를 기념하는 경마가 미국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클리스가 6·25 때 미 해병대 군마로 참전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전투 현장을 누비면서 혁혁한 공을 세워 가지고 미 해병대 최초로 말에게 하사 계급장을 주고 그리고 미 라이프(LIFE)지 선정 100대 영웅으로 선정이 되지요.

레클리스가 제주마인 것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랐습니다.

○문대림 위원 물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 주장 맞습니다. 균형발전 기여도 중요하지만요 산업의 연관성을 따져 봤을 때 그리고 마산업과 관련해서, 경마산업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산업적 연관성, 관광, 휴양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이게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균형발전 기여도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그중의 한 요소이고요.

○문대림 위원 상임위 제대로 안 돌아갈 겁니다.

김성환 장관님,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률이 5%가 넘지 않습니까? 7.89%입니다, 승용차만 놓고 봤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제일 높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화물차 전기차 보급률은 한 13%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탄소배출권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5%가 넘으면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저도 위원님이 관심 가지셔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논리는 있었습시다마는 국토부인 경우에 두 번, 이중 혜택이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인 경우에 구매보조비율만큼 지자체 몫으로 보고 차량 소유자가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기준이 없이 구두로 그냥, 국토부 담당 팀장이 구두로 해서 5% 넘었으니까 탄소배출권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그 기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보급률의 속도감을 위해서 기후에너지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금방 발언하신 분이 어느 도에서 오셨는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제주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복지부장관님, 코로나 백신, 이물질 백신 접종에 관해서 책임 안 지십니까? 저는 아무런 책임 안 지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곰팡이, 머리카락 들어 있는 이물질 백신으로, 지금 일본은 그런 백신 다 폐기했는데 우리는 이물질 백신 1420만 회 접종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동일 제조번호의 국민들 이상반응 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 이물질 백신 맞은 사람들, 그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반응 신고 48만 건 그리고 사망 2800건.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요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이 또 불용이 72%예요. 왜 이렇게 보상은 더딥니까? 특별법 만들었는데 특별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준비해 왔다가 딱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심의위원회 구성해 갖고 심의가 시작된 것이 올해 4월이에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그리고 나서 심의도 아주 거북이 걸음입니다. 6월에 보니까 3814건 접수됐는데 21건, 이래 갖고 어느 하세월에 심의해 갖고 보상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위원님, 질병관리청……

○**나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그다음에 보상 안 하고 이려고 있는데 또 유족이 1건 행정소송 이기니까 이걸 또 항소를 해요, 항소.

질병관리청장도 나와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위원** 그것도 항소하셨지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항소 포기하면서 유족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 꼭 항소해야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님, 제가 그 판결문도 봤는데 항소 취하하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에서는 재판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송행정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항소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 하나 마나 한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 위원회 구성은 미리미리 안 해 놓고 시행일로부터,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이나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십니까? 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 놓고 사람의 생명에 등급을 매깁니까? 세월호, 이태원 전부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상했습니다.

저는 책임이 중한 걸로 따지면 코로나 피해자가 가장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안 지는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추정 문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은경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윤철 장관님, 6·25 참전유공자 이제 2만 명도 안 남으셨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올해 조금 올려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박홍근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경원 위원** 기획예산처장관이시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 요청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보니까요 이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에다가 임대주택 지으려다가 내심 들키니까 지금 도망가고 말장난하고 계세요. 제가 왜 그 주장을 하느냐? 이 부동산 대책 잘못해 갖고 온갖 욕을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무마하려고 용산어린이공원에다가 이제 이 임대주택 짓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용산공원에다가. 7월 21일 국방부에서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어요, 용산어린이공원. 아시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모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7월 21일에 이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제해 놓고 여기다 집 지으려다가 이거 욕먹으니까 지금 용산공원 전체 중에서 일부 훼손된 데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한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한다는, 용산공원 전체를 통으로 보전한다는 것의 원칙에 반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원 중에서 장교 숙소 있는 데 쥐 파먹듯이, 쥐 갇아 먹듯이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원 보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면 7월 21일에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이렇게 해제했느냐? 저는 뒤로는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이거 욕먹으니까 이제 와서 말 바꾸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정원이 아니라 용산공원의 다른 부분을 일부 훼손이 됐네 어쨌네 하면서 거기다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집을 청년주택이라고 하면서 청년의 임대주택만 하라고 한다, 저는……

공급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 공급하는 것 있고, 임대시장의 공급을 민간 임대시장 공급 활성화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대출 규제 풀어서 집 사거나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용산공원 제대로 보전해 주실 것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나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재 하실 말씀 계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 들으셔 가지고요.

참전용사 등 보훈수당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이미 개선한 부분도 국정과제에 따라서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방금 언급하신 부분은 보훈부에서 강력히 저희에게 요청해서 최근 근래에 어느 정부보다 좀 더 두텁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그 수치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좋은 소식이 있는가 보지요?

국토부장관도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복지부장관님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복지부장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이물질 백신은 접종 전에 확인이 돼서 폐기가 됐고 접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1400만 건은 아마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접종 건수를 말씀 주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보상금이나 심의 지연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상의해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이게 참 우리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벌써 하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삼가려고 했었는데 경제에 관한 질문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경부장관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을 어제 말씀해 보니까 한 11월쯤 발표를 하실 거라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토부장관님이……

○권향엽 위원 아, 국토부장관님이신가요?

항만 통합에 대한 것도 지금 국토부장관님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권향엽 위원 아니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통합은 또 저희들이 합니다.

○권향엽 위원 지금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중에서 주요 항만 통합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저희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부산항만공사라든가 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4곳 모두가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권향엽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역균형성장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독립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같은 뜻인 것 같고요.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 같은 경우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북극항로 개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균형성장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효율성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자부장관님, CPTPP 이것 논의 공론화 시작하시나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공론화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내일 대경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오늘 보니까 여성농민회에서도 올라와서 집회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는. 수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가 산업부 차원에서는 기업들의 걸림

돌이나 장애 제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또 여기에 주도를 하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신에 정부 내에서 각 부처 간에 사전 조율과 현장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송미령 장관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우리 농업계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큼니다, 위원님.

○**권향엽 위원**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피해액은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게 또 대외 협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권향엽 위원** 사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보호 이 부분이 양자가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현장에서의 파장이 크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산업부장관님,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사기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사기 분양 피해 현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직접적인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식산업센터 설립 근거인 산업집적법이 산업부 소관의 법률이기는 하지만 각 센터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도적 허점인 것이고요.

총 17개 센터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4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지식센터 자체가 총 1561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감안한다면 49건의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 분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공실률 문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공실률이 적게는 20%, 많게는 80% 정도 되다 보니까 센터를 건립한 지자체나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공실률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기 분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부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도록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설립 주체하고 운영과 관리 감독이 다 이렇게 좀 따로 있고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법도 좀 필요하고요. 공실률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주거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도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이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께 도움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식산업센터 이게 지금 엄청 공실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동구에 보게 되면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딱 찼고.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서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 문제의 전환을 만들든지 뭔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읍의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요즘 어떤 장관님이 출장을 많이 다니실까요? 김정관 장관님, 출장 많이 다니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해외 갈 때 핸드폰 로밍해서 가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준석 위원 배경훈 부총리님,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로밍해서 가시지요?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게 요즘 국민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 예전에는 로밍 많이 하시다가…… 로밍이 하루에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SK텔레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체품으로 많이 쓰시는 것이 eSIM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eSIM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국가별로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아시아 십몇개국 eSIM 이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3GB에 2만 원 이 정도가 SK텔레콤 단가라고 그러면 이것 3GB에 2000원 이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USIM이라 그래 가지고 실물을 받아야지만 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로밍 쓰시는 분이 있었다면 요즘 해외여행 가는 젊은 세대는 거의 다 eSIM이라는 것을 사 가지고 해외에서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가면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로컬망, 로밍망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로컬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밍망이라고 쓰인 것이 거의 반값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 뭐냐 봤더니만 CMLink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CM이 됩니까? 차이나 모바일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에서 이것을 파는 것을 우리나라의 이런 eSIM 업체, USIM 업체들이 리셀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핸드폰의 고유아이디 같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EID부터 시작해 가지고 IMEI 이런 정보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나는 베트남의 eSIM이라 생각해서 샀는데 사실은 중국 eSIM이었고 가 가지고 그 핸드폰 켜는 순간 우리 핸드폰의 고유 정보들이 중국 서버에 등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보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그런데 업체에서 판매할 때 고지가 안 돼 있습니다. 저게 실제로 팔리는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보게 되는 것들인데요. CMLink라는 것을 쓴다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저게 중국 로밍망인지 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고지 사안이고요. 사실 중요사항,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보면 중요사항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베트남에서 우린 분명히 베트남 망에 접속했는데 중국 eSIM을 쓰게 되면 중국 서버까지 가 가지고 다시 데이터가 돌아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하게 느립니다, 실제 조금 더 비싼 베트남 로컬망이나 아니면 로밍망보다. 그러다 보니까 5G 제품이다 아니면 LTE 제품이다라고 eSIM을 홍보했는데 속도가 그 반의 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사실상의 과잉 광고이면서 통신품질이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왜 관리가 안 되는가 봤더니만 우리 국내 통신사라 하더라도 이원화돼 있습니다. 우리 통신사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정책이나 이런 건 방미통위에서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통신망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LA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유선망 같은 경우에는 1GB 인터넷을 집에 샀다 그러면 50% 정도는 성능이 나오도록 과기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무선망 같은 경우에도 우리 통신 3사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밍망이나 아니면 이런 해외 eSIM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누구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부총리님하고 그리고 또 김종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에 미고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중국 통신망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방미통위에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품질평가, 실제 5G·LTE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광고된 속도의 반의 반도 안 나온다. 이건 사실 로밍망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두 분이 잘 협의하셔서 가지고 이 부분은…… 요즘 여행자들은 이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또 광고된 것과 다른 상품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도 사실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송경희 위원장 안 계시니까 따로 저희 의원실에서 이 세 부처에다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 부총리님께서 꼭 관심을 갖고 봐 주십시오. 중국 통신사로 1년에도 수십만 명의 핸드폰의 IMEI 그리고 EID 정보가 지금 자동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이나 이런 관점에서 꼭 과기부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제기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5분만 참으십시오.

먼저 재경부장관님, 서울에 1주택자가 149만 가구인데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작년 2025년 종부세 대상자는 15만 정도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는 서울……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0~3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15만 가구의 20~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금년 같으면 한 19만 가구 정도가 돼서 한 4만 7000, 한 5만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유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주하고 이렇게 안 드러나는데 앞으로 아마 거주·보유를 구분하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연희 위원 얼마 전에 세계일보로 기억하는데,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를 83만 가구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지금 시가 20억까지는 거주든 비거주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게 통계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 국가통계청장님 계신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데이터처장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저희가 주택 소유 통계가 1년에 한 번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요? 국가데이터청에서 그 통계 갖고는 계십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저희가 주택 소유 통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고 비거주가 이번의 세법과 관련된 그 개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재경부장관님, 다시 범위를 확대해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비거주 1주택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에서 지금 14억 공시가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19만 정도로, 이렇게 다 합쳤을

때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연희 위원 금융위원장님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금융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들은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한 6만 건 정도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보는 것은 과세를 하려면 그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과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측 답변을 들으면 지금 5만에서, 4만 5000에서 80만까지 폭이 넓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과세 대상자가 80만은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다른 통계, 그러니까 데이터청의 통계를 돌려서 하는 부분을 보면 30만으로도 보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청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그 통계를 작성하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 보고서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대상자를 파악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정확한 과세 대상을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과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만과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1주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불가피한 사례들이 제가 보기에선 그리고 정치권에서 보기에선 수십 수백 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외로 인정해 주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가능하면,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예컨대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6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만 이렇게 가는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사람들까지 다 넣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언론에서는 서울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1주택자가 46만이고 서울 내의 다른 구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이 36만이라고 해서 총 82만 내지는 83만으로 보는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4만에서

5만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 당국에서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세를 하려면 대상자를 특정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청에서 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월요일 날 10시에 개회를 할 예정입니다. 비경제부처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계신 위원님들은 윤용근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이진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허영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회의 끝까지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줄곧 지켜보면서 주요 쟁점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A4용지 10장 정도의 주제를 갖고 제가 다 정리를 했었는데, 정말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 전체 파일이 있으시잖아요. 파일 같은 것을 질의하신 데 전체적으로 좀 보내 주시면, 어차피 이게 예산 때 또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산공원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용산공원이 국민의 품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20년이 지나도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인간은 오류가 많은 인간인데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축수가 얼마나 발달돼 있느냐 그리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를 갔는데 아이가 쓰던 인형이 다 낡아서 인형을 버리고 이제 새집에 와서 인형을 새로 사 주면 되지 그랬는데 계속 울고 그래 가지고 옛날 살던 집에 가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 가지고 그 낡은 인형을 들고 와서 아이한테 갖다 주면서 느낀 게 있었대요. 나한테는 새 인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한테는 그 낡은 정이 든 인형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우리는 아마 서로 각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주택 공급은 김윤덕 장관님도 확실히 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향엽 김남준 나경원 문대림 박정하 배준영 송언석 안도걸 유상범 윤용근

이건태 이광재 이연희 이인선 이종욱 이준석 정준호 정태호 정혜경 조인철
한동훈 허성무 허영

○청가 위원(2인)

박상웅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이윤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호철

기획조정실장 이윤재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정책기획관 정상용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기획조정실장 김현정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기획조정관 우영택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기획조정관 양순필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기획조정관 박현희

국세청

청장 임광현

기획조정관 유재준

관세청

청장 이종욱

정보국장 김기동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기획조정관 장홍태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산림청

청장 박은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획조정관 장호연

기상청

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김동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문성요
기획조정관 정인권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기획조정관 성종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기획조정관 김문식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기획조정관 손주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기획조정관 김기환

감사회의의록